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강득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865
----------	------

발의연월일 : 2025. 2. 3.

발 의 자 : 강득구 · 채현일 · 송재봉
박홍배 · 김문수 · 김기표
윤종오 · 서삼석 · 이학영
김성환 · 김남희 · 전종덕
이광희 · 맹성규 · 정동영
전재수 · 김준혁 · 박 정
김남근 · 김영환 · 김태선
의원(21인)

제안이유

모든 근로자는 건강하게 일할 권리와 근로기준에 관한 권리, 단결권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 등의 노동인권을 가짐. 그러나 실제 노동현장에서는 사업주 등에 의해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 본인이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특히 청소년, 외국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쉬움.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을 인식하게 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6조).

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이를 반영하여야 함(안 제8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노동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

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3조).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인권교육”이란 안전하게 일할 권리,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사생활의 자유 등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 옹호와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 노동인권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말한다.
3. “사회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이하 “평생교육기관”이라 한다) 등에서 행하는 노동인권교육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동인권교육의 실시와 진흥에 관하여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청소년·여성 근로자 및 이주배경 근로자 등 노동인권 보호에 취약한 사람(이하 “노동인권약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노동인권교육위원회의 설치 등) ①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노동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노동인권교육의 정책방향
2. 제6조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3. 제7조에 따른 노동인권교육 추진성과에 관한 평가
4. 노동인권교육 업무의 협력·조정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용

노동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1. 교육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노동인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인권약자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5년마다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의 추진성과 평가의 항목, 절차와 방

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 노동인권교육) ①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인권교육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을 받은 국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정책 및 교재개발 등을 위한 연구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교 노동인권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회 노동인권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노동인권교육 관련 단체와 평생교육기관 등이 운영하는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노동인권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2. 사회 노동인권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사회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노동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에 따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등의 전문기관을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동인권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교육과정,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교육기능 수행 역량, 교육 관련 인력의 전문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노동인권교육기관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인권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2.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3. 교육 시설·장비의 설치 및 활용
4. 노동인권교육 관련 기관·단체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5. 그 밖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노동인권교육기관의 구체적인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지정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노동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3.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교육 실적이 저조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